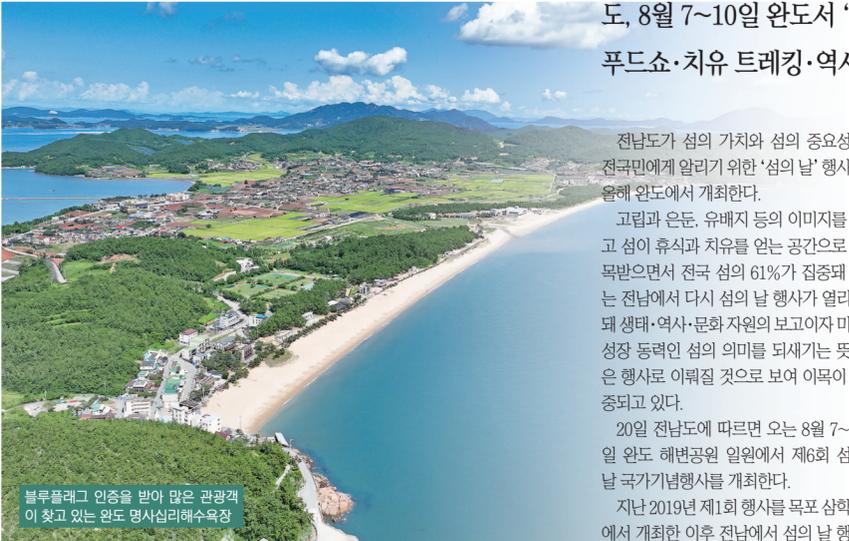


POLITICS 6년 만에 전남서 섬의 가치·미래 조명한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도, 8월 7~10일 완도서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 푸드쇼·치유 트레킹·역사 탐방 등 프로그램 다채

전남도가 섬의 가치와 섬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섬의 날' 행사를 올해 완도에서 개최한다.

고립과 은둔, 유배지 등의 이미지를 벗고 섬이 휴식과 치유를 얻는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전국 섬의 61%가 집중돼 있는 전남에서 다시 섬의 날 행사가 열리게 돼 생태·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8월 7~10일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제6회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를 목포 삼학도에서 개최한 이후 전남에서 섬의 날 행사

가 개최되기는 6년만이다. 그동안 경남 통영, 전북 군산, 경북 울릉, 충남 보령 등에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완도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신지명 사십리 해수욕장과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치유센터 등 천혜의 치유 자원을 품은 섬으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완도군은 '국제 해조류박람회(2021년)',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2020년~매년)',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2009년~매년)', '제13회 수산인의 날 축제'(2024년) 등 크고 작은 국제·국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올해 행사는 크게 국가기념식, 전시행사,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국가기념식에는 주요 인사와 섬 주민, 관광객 등 20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섬의 날을 기념한다. 이 자리에서는 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주제 퍼포먼스, 주민이 참여하는 개회 선언 등이 진행된다.

전시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섬 정책, 관광, 특산물 등을 소개한다. 부대 행사로는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섬 푸드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전국 섬 청년들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프로젝트, 해양치유 체험과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있다.

특히 방문객을 섬 주민이 직접 맞이하는 경관·산림 치유 트레킹, 섬 문화·역사 탐방 프로그램 등은 완도 섬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더욱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제 섬은 머무는 곳을 넘어 우리 삶과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물결 따라 사람 따라, 섬의 시간을 품은 이남이 단지 하루의 기념이 아닌, 섬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섬의 날'은 지난 2019년 8월 8일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특히 전국 3534개 섬 중 2165개(61%)가 집중된 전남도는 섬의 날 제정을 위해 2016년부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념일 지정 과정에서는 국민 공모를 통해 3월 3일, 7월 7일, 8월 8일 등이 후보로 제안됐으며, 이 중 8월 8일은 숫자 '8'을 열로 돌리면 무한대를 뜻하는 '∞'로 보이는 점,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전진속 "민주당 승리, 내란세력 청산 첫 걸음"

민주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 파면보고·대선 승리 결의 다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는 19일 오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파면보고 및 대선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파면보고 및 대선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600여명의 당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기, 이언주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축전과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123일 간의 파면 보고'에서는 광주시민과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제작된 영상을 시청하며, 내란수괴의 파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추위와 땀이 필

요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비상계엄의 위협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을 멈추지 않았던 광주 시민과 광주북구를 당원 동지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진속 의원은 "윤석열 파면은 123일간 눈보라를 맞으며 광장과 거리를 지키신 새

한국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내란이 멈춘 것은 아니며, 내란세력 청산의 첫 걸음은 민주당의 압도적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6·3대선 승리 견인"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발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조직 운영에 나선다.

2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모경중(인천 서구부) 전국청년위원장, 이행도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전남지역 청년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이 꿈꾸는 미래! 청년이 만들어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특히, '청년의 힘으로 대선 승리'라는 문구의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전남 청년들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행도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은 "청년의 열정과 의지가 곧 전남의 변화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다"며 "청년의 힘으로 지역 정치 변화를 이끌고 조직력을 강화해 6·3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경중 전국청년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청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남 청년

들의 정치적 참여와 함께 조직력을 강화해 대선 승리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은 "오늘 청년위원회 발대식은 전남 청년 정치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며, 대선 압승을 향한 첫걸음이다"며 "전남 청년들의 열정은 언제나 민주당을 지탱해온 힘이 있다. 전남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겸 정소해 청년위원회 홍보국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4·10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청년의 힘으로 정권교체의 민주주의 회복을 실현하겠다"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며, 정의롭고 상식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현규 기자

'어린이 핫플' 광주시 어린이안전체험관 인기

광주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청 1층에 위치한 이 체험관은 올해 1분기 이용객이 전년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찾은 방문객은 140개 단체, 총

42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2201명)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인기 상승 요인은 지역아동센터·광주시교육청·아동 관련 부서·기관의 홍보 강화, 만족도 조사 실시, '열린청사'를 활용한 안전 그림그리기 프로그램 운영, 1회 체험인원 확대(20~30명)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예년에는 개학 기간 이용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4월 현재까지도 예약 및 체험 인원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1월 문을 연 광주시 어린이안전체험관은 4~12세 사이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지하철체험 등 13종의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승기 기자 sky@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역 정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세 피해 심각"

이광일 도의원, 예찰·방제 촉구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여수·사진)은 최근 열린 전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한 철저한 예찰 활동과 신속한 방제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100% 고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수 인근 섬 지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고사목만 앙상하게 남아 방치되

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사목들이 마른 장작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이나 산사태 등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이 병해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피해 지역에 관련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2021년 2만 그루, 2023년 2만6000그루, 2024년에는 4만4000그루로 급증했다. 이현규 기자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 고려해야"

이철 도의원, 현실 반영 주문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사진)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임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행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임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임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

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필요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재정 법무담당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면 확대 촉구"

이규현 도의원, '정책 집행'을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사진)은 최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규현 의원은 "해당 사업은 현장에

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11개 시군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3개 시군만이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불과 30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또 또한 이에 상응하는 매칭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작지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